

치유순례관광 메카 '급부상'

익산시, 4대종교 성지 순례·다양한 종교문화 체험 통한 힐링여행

익산시가 국내 유일 4대 종교문화 체험여행으로 치유순례관광 메카로 급부상하고 있다.

한국형 산티아고길'이라 불리울 만큼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까지 시기적으로 삼국시대부터 근현대까지 종교 역사를 한 곳에서 압축해 만날 수 있는 성지 순례 관광지로 평가받고 있다.

다이로운 익산여행은 대한민국 대표 4대종교 성지를 방문해 종교 문화를 체험하고 지역 관광지를 돌아보는 '익산방문의 해' 대표 관광상품이다.

원불교총부, 내바위성당, 두동교회,



삼곡사, 미륵사지 등 4대종교 성지를 방문해 종교시설 해설과 명상, 순례길 걷기 등 치유 문화를 경험한다. 또 아가페정원, 용안비탈개비길, 구룡마을 대나무숲 등 천천히 걸으면서 명상으로 힐링하는 시간도 제공한다.

특히 올해는 1박2일 동안 4대 종교 성지 순례를 느끼게 하고 명상하는 치유와 힐링 여행을 진행한다.

시는 지난해 처음 종교문화 체험으로 '치유 순례 관광'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선보이며 관광객들에게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는 4대종교 다이로운 익산여행을 올해는 상반기, 하반기 두 차례 나누어 운영한다고 밝혔다.

상반기 신청 접수는 오는 24일부터 진행되고, 운영은 4월 21일부터 시작된다. 참가비는 1인당 2만 원, 신청은 익산시 통합예약시스템에 접속해서 할 수 있다. /익산=이재훈 기자

군산새만금신항 관할권 사수 전북도 노력 촉구

군산시의회, 집행부와 긴급 간담회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군산새만금신항 관할권 분쟁과 관련하여 시장, 부시장 등 집행부와 연달아 회의를 열고 시의 강력한 대응 및 시의 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당부했다.

김영일 의장은 지난 21일 집행부와 긴급간담회에서 "전라북도가 선제적으로 새만금 관할권에 대한 중재 원칙을 가지고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를 추진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김제시(先) 결정 후(後) 개발이라는 엉뚱한 논리에 수수방관하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김제의 새만금매립제시민연대에 이어 군산에서도 군산새만금지킴이범시민위원회가 출범하는 등 관할권 문제가 시민 갈등으로 치닫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이어 "두 지자체가 대형로프로 큰 비용을 들이면서 분쟁을 하는 것을 도가 언제까지 지켜만 보고 있을 건지 묻고 싶다. 전라북도 소관 갈등조정전문위원회가 10년째 열리지 않은 것만 봐도 도가 도민의 화합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서야 이렇듯 바꾸는 조례를 개정한다고 해서 위원회가 잘 돌아갈지 의문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라북 '도' 청은 전라북도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관할권 사수 노력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군산=이재훈 기자

'시' 청이 아니다. 거시적인 안목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 등 도내 현안 사업을 무산되지 않도록 중재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면서 "군산시도 마찬가지이다. 순간순간 넘기면 된다는 언 발에 오줌누기식' 행정으로는 지역의 살길을 찾을 수 없다. 군산새만금신항 관할권에 대해 강력하게 추진하지 못할 바엔 차라리 의회에 권한을 넘겨라. 이승우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 위원장과 논의하여 의회 차원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하며 군산시가 군산새만금신항 관할권 분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22일 개최된 의정단 회의에서도 "우리 시가 더 이상 밀리면 안된다. 현수막 게릴라 등 시민 모두가 현재 위기 상황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타 지역 시민들도 인정할 수 있는 논리 개발에 중점을 모으는 등 발뚧처럼 달려들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일준 군산시장은 "군산새만금지킴이범시민위원회 출범식에서 시민들에게 시장직을 내걸겠다고 다짐한 상황에서 수막 게릴라 등 시민 모두가 현재 위기 상황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타 지역 시민들도 인정할 수 있는 논리 개발에 중점을 모으는 등 발뚧처럼 달려들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군산=이재훈 기자

"속출하는 '어린이집 폐원' 대한 지원대책 마련을"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 대표발의 건의안 채택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는 23일 제25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어린이집 폐원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건의문을 대표 발의한 한경봉 의원은 "우리는 '출생아 급감'에 따른 인구 감소로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사회적 문제 해결에 난항을 겪고 있다"며 "특히, 영유아보육의 요람인 어린이집 폐원은 대한민국 보육 정책의 오류이자 미래세대 기대에 대한 정서적 훼손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영유아보육사업은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을 통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며 "1995년부터 1997년까지 3년간 진행된 보육시설확충 3개년 사업으로 전국 보육시설의

수는 2.5배 이상 증가하였다"고 했다. 그는 "2008년 시작된 '보편주의적 공보육사업'의 정부 정책과 맞물려 보육시설의 양적 증가가 가속화되었으나 이에 반해 현재는 영유아수의 급감으로 '어린이집 폐원'이라는 문제적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면서 "어린이집 개설을 권장할 때는 언제고 이제와서는 '힘들면 폐원한다'는 식의 정책 기조에 따른 피해를 어린이집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나라 출산율은 2022년 23만1,862명으로 이미 최저치를 경신했고 2023년 합계출산율 0.74명으로 정점을 찍으며 영유아의 감소세는 계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며 "지난 2017년 전라북도 내 1,500여 곳에 달했던 어린이집은 22년 8월 말 1,032개로 6년 동안 465개소가 문을 닫았고 군산시 관내 어린이집도 250여 개소의 어린이집 중 100여 개소가 문을 닫아 153개소만이 현재 운영 중이다"라고 했다.

고 했다.

그러면서 "폐원의 첫 번째 이유가 저출생이라지만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 병설 격의 단설유치원의 증가, 100만 원을 웃도는 가정 보육비 지급도 한몫하고 있다"며 "줄줄이 폐원하는 어린이집으로 인해 아이들과 학부모는 '보육난민'을 우려하고 원장과 교사는 '실직의 불안'을 토로하며, 교육 현장은 '보육의 질적 하락'을 염려하는 총체적 균열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어린이집의 폐원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니라 최저임금도 안 되는 원장 본인의 월급과 교사 인건비 마련에 지친 원장들의 시름의 결과물"이라며 "아동복지에 힘써온 원장이 폐업 절차에 대한 모든 경비 자비부담·사에서 지원받은 공기업청기 등에 대한 보조금 반납·폐원시 발생하는 각종 폐기를 처리 등 많은 일을 오롯이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산=이재훈 기자

군산시, 영세 소상공인 지원사업 신청 접수

군산시가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실시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시는 23일 올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기간 만료(4월4일) 도래와 최근 난방비 등 공공요금 폭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22년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게 경영지원금(난방비) 20만원 및 2022년 카드매출액의 0.5%에 해당하는 카드수수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본 사업은 공고일(23년 3월 23일) 이전 휴·폐업하거나 타 시·도 이전한 경우, 유흥업소, 도박 등 신용보증재단 제한업종 및 정책자금 제외업종에 해당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경영지원금(난방비)의 경우 자택 사업장이나 무점포 사업장일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하다.

지원금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23일부터 시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경영지원금 및 카드수수료 두

가지 지원사업을 각각 신청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민약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나 군산시청 지역경제활력과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을 구비해 방문하면 된다.

신청기간 첫 주는 혼잡을 피하고자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 23일에는 끝자리 3·8, △ 24일에는 4·9, △ 25일에는 0·5, △ 26일에는 1·6, △ 27일에는 2·7이다. 28일부터는 5부제 관계없이 신청가능하다.

김현석 지역경제활력과장은 "경영지원금(난방비) 및 카드수수료 지원을 통해 경기침체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이 경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군산시청 지역경제활력과(☎454-2680)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이재훈 기자

지역 소식통

익산시의회, 장애인 일자리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오임선)가 신용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장애인 일자리 지원 조례'를 가결했다.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통해 장애인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제정된 이 조례는 장애인고용 의무제를 확대, 공공부문 장애인 일자리 창출, 장애인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장애인 일자리 사업과 관련하여 지원되고 있던 각종 보조사업의 법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신용 의원은 "지난 3년간 익산시가 실시한 공공일자리를 통해 8,869명이 일자리를 얻었지만, 그 중 장애인은 전체의 4.6%에 불과한 415명이었다"며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통한 사회참여가 늘어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익산=이재훈 기자

익산시, 성숙한 다문화정책 선도도시 전국 인정

성숙한 다문화사회를 선도하는 익산시의 노력이 전국적으로 인정받았다. 시는 2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0회 다문화정책대상' 시상식에서 조남우 여성가족과장이 특별상(유공 공무원)을 단독 수상했다고 밝혔다.

다문화정책대상은 다문화정책을 선도하고 관련 정책 개발에 기여한 기관, 단체, 공무원을 격려하고자 제정되었으며 세계일보가 주최하고 행정안전부와 여성가족부가 공동협력하여 시행한다.

특별상을 수상한 조남우 여성가족과장은 ▲세계시민을 교육하는 전사·체험시설인 익산글로벌문화관 운영 ▲시장 직속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위원회 운영 등 다문화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익산=이재훈 기자

군산시 김미정 부시장, 고군산군도 현장 점검

고군산군도 불법 건축물 점유 및 영업행위 등 각종 사안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김미정 부시장, 고군산군도 행정실무협의회체 해당 과장들과 현장에서 회의를 주재하며 대책을 논의했다.

김 부시장은 해당 과장들과 1차 현장 점검 후 당일 고군산탐방지원센터에서 2차로 구체적인 처리 대책 등에 대한 회의를 진행했다.

특히 군산 대표 관광명소의 위상에 맞게 쾌적한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소관 부서별로 신속한 대책 이행 및 지속적인 시설·위생 관리에 만전을 다 할 것을 주문했다.

김 부시장은 "고군산군도가 서해안을 넘어 글로벌 대표 관광명소로 자리 잡기 위해 시 공무원들은 물론 지역주민과 인근 상인들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으로, 불법행위 근절에 지속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군산=이재훈 기자

행정과, 산림복지과, 도시계획과, 건설과, 건축경관과, 하수와 등 해당 부서가 참여하는 고군산군도 행정실무협의회체 해당 과장들과 현장에서 회의를 주재하며 대책을 논의했다.

김 부시장은 해당 과장들과 1차 현장 점검 후 당일 고군산탐방지원센터에서 2차로 구체적인 처리 대책 등에 대한 회의를 진행했다.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